

아침세평

임규훈

약생한의원장



대한민국의 저출산 위기가 재앙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데이터터치 발표에 따르면 함께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인구 소멸이라는 단어는 이제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환경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들의 고통은 여전히 깊다.

난임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다. 한 가정이 겪는 심리적 상실감과 경제적 부담, 그리고 사회적 소외감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줘야 할 몫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주시와 광주한의사회가 시행 중인 '한방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현대 의학의 한계를 보완하고, 난임 부부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다.

난임 치료라고 하면 흔히 시험관 아기(체외수정)나 인공수정을 먼저 떠올린다. 물론 현대 의학의 기술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기계적인 시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한의학은 바로 이 지점, 즉 '생명이 잉태될 몸의 환경'에 집중한다.

저출산 시대, 한의학이 대안이다

농사를 지을 때 좋은 씨앗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일이다. 한방 난임 치료는 여성의 자궁 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기혈을 보하며, 남성의 정자 활성도를 높이는 등 신체 전반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한다.

인위적인 호르몬 자극이 아닌, 신체 스스로의 자생력을 회복시켜 자연 임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술 과정에서 겪는 여성의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가진다.

광주시는 광주한의사회와 함께 지자체 중에서도 선제적으로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체계화해 왔다. 이 사업은 단순히 한약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엄격하게 선정된 지정 한의원을 통해 전문적인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6년 현재 광주시와 광주한의사회가 함께 하는 사업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난임 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는 난임이 부부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한방 치료를 망설였던 부부들에게 광주시와 광주한의사회의 지원금은 실질적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 있다.

과거 한방 치료에 대해 제기됐던 '객관적 유효성' 논란도 광주시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광주한의사회의 데이터 축적을 통해 해소되고 있다. 사업 참여 전후의 신체 변화, 임신 성공률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한방 난임 지원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가고 있다.

난임 부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육체적 통증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에서 오는 절망감이다. 광주시의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은 그들에게 '당신들의 기다림에 광주시가 함께 한다'는 든든한 사회적 신뢰를 보내는 메시지다.

출산율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난임 부부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지다. 전통의 지혜를 현대적 정책으로 승화시킨 이 사업이 더 확대되고 내실화돼, 광주의 모든 가정에 건강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 생명을 기다리는 모든 부부의 품에 따뜻한 봄날의 기적이 닿기를 소망해 본다.

추가적으로 난임 부부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방난임 치료비지원 사업 내용과 지원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지원내용은 한약 3개월분을 전액 지원한다. 침구치료비는 본인부담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44세 미만,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지속적인 내원과 치료가 가능한 경우, 사업 기간 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은 자 등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검사기록지 등이다.

이런 자격을 갖추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한방난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광주한의사회(062-223-9481)로 전화하면 된다. 난임부부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한다.

기고

강병국

전 무안군의회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전남의 시·군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자리를 무거운 정적만이 채우고 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와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강요받고 있다. 인구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지역 산업은 활력을 잃어가는 위기 속에서,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는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두 지자체가 하나가 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타당하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행정구역의 물리적 통합이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떠나간 청년들이 돌아오고 지역의 활력이 마법처럼 되살아날 것인가?

과거의 통합 사례들을 돌아켜 볼 때, 외형적인 '그릇의 변화'만으로는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합이라는 형식 아래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 즉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설계도다. 필자는 그 해답을 전남의 독보적 강점인 신재생 에너지를 지역의 '공유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에서 찾고자 한다.

전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메카이자 기회의 땅이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최전선으로서 전남이 보유한

에너지 수익 공유로 지방소멸 극복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자립을 견인할 만큼 막대하다. 그동안 에너지는 단순히 중앙정부나 거대 자본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치부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전남의 바람과 햇빛은 특정 기업의 수익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이미 신안군에서 시행 중인 '햇빛연금' 사례는 에너지 수익이 어떻게 주민의 기본소득으로 전환돼 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해냈다. 행정통합은 이러한 '에너지 배당'의 규모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수익 공유 기반의 기본사회'이다. 이는 단순히 새로이 주장되는 정책이 아니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지향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이기도 하다. 광주의 기술력과 자본, 전남의 자원이 결합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시·도민의 '기본소득'으로 연결할 때 통합의 시너지는 비로소 완성된다.

행정통합 이후에도 전남의 경제적 근간은 여전히 농업, 관광, 제조업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산업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농업은 국가의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공익적 산업이다. 따라서 농민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돼야 한다.

관광과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 서비스'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에너지 수익으로 확보된 재원은 이러한 기본권 보장의 튼튼한 재정적 토대가 될 것이다. 전남이 더 이상 노동력과 자원만 제공하는 배후지가 아니라, 에

너지 자립을 기반으로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기본사회의 전초기지'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다.

행정학적 관점에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성패는 주민들이 느끼는 '효능감'에 달려 있다. 단순한 행정 효율성 중대만으로는 동의를 얻기 어렵다. 행정통합의 첫걸음은 주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필자는 기초의회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소소한 행복과 안전한 일상을 지향하는 데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통합 논의가 광역 지자체 간의 권력 배분이라는 '위로부터의 시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의 주민들이 통합을 통해 어떤 직접적인 배당을 받는지, 에너지 수익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체감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약속'이 병행돼야 한다.

이제 행정통합을 단순한 구역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양극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거대한 국가적 실험장으로 바라봐야 한다. 전남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기본사회의 기틀을 닦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실현될 때, 우리 지역은 소외된 변방이 아닌 에너지 자립과 보편적 기본권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미래 모델의 선도자가 될 것이다. 통합의 심장은 '기본사회'에 있으며, 그 핵심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뜨겁게 흐를 것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로서의 행정통합,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품격 있는 삶, 우리가 꿈꾸는 전남의 새로운 길은 이미 에너지 수익 공유라는 혁신적 발상에서 시작되고 있다.

취재수첩

백년의 시간, 하루의 위기

김은지
산업부 기자



도시의 품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 '얼마나 많은 시간을 품고 있는가'일 것이다. 대를 이어 불을 밝힌 가게와 한 우물을 파며 기술을 쌓아온 공방은 그 자체로 지역의 역사이자 자산이다. 광주에도 그런 이름들이 있다. 수십 년 한자리를 지켜온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들이다.

그러나 '백년'이라는 이름과 달리 생존은 하루 단위로

반면 우리의 현실은 아직 상점에 머무는 측면이 크다. 백년가게로 지정되면 현판과 홍보 지원이 뒤따르지만, 구조적 비용 부담까지 감당해주지는 못한다. '선정' 이후의 생존은 개별 점포의 몫이다.

전통은 보호의 대상이자 혁신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장수 기업을 문화 자산으로 인식하고, 금융·세제·승계 제도까지 연계해 '지속'을 제도화할 때 비로소 세월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광주의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역시 마찬가지다. 인증을 넘어 경영 안정 자금, 원자재 공동 구매, 임대료 완화, 후계 육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단순히 오래된 가게를 기념하는 데서 멈춘다면 '백년'은 브랜드에 그칠 뿐이다.

도시의 깊이는 최신 상관만이 아닌 오래된 가게의 나무 의자와 손때 묻은 작업대, 그 안에 축적된 시간에서 비롯된다. 그 시간을 지켜내는 일은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다. 우리의 골목들이 '백년'을 말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이름이 아니라 구조를 고민해야 할 때다.

사설

광주~나주·화순 광역철도 절실하다

광주와 나주, 그리고 광주와 화순을 잇는 광역철도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전남도가 이들 구축사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교통 분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절차를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철도 구축사업은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역 생활·경제권 형성을 뒷받침할 전략 사업이다.

이에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이들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 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 특례로 담아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광역철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주~나주 광역철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예비타당조사에 착수하고,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8월 이 사업을 특별광역연합 공동사무 제1호 안건으로 선정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노선을 광주 효천역 경유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광주 도심인 상무권과 나주의 혁신도시·나주역 권역을 광역철도로 직결해 광주·전남을 '60분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교통망 구상으로 총사업비 1조7000억원을 투입해 광주 상무역을 출발, 효천역~도시첨단단지~남평읍~공동혁신도시를 거쳐 나주역까지 총연장 28.77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광주와 공동혁신도시의 통학·통근 수요를 흡수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혁신도시·산단·에너지·농수산물센터 등 핵심 거점의 접근성을 개선해 경제생태계의 성장 기반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사업비 4600억원을 들여 광주 소태역~선교~화순읍을 거쳐 화순전남대병원까지 11.58km를 연결하는 광주~화순 광역철도는 출퇴근·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백신·생물의약품 중심지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와 생활권을 통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광주와 전남도는 지역을 동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이들 노선이 국가철도 계획에 적극 반영되고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아파트 수급 불균형에 매물 쌓이는데

광주에 아파트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예전에 지은 아파트는 물론 그동안 미뤄졌던 1만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 물량도 분양 대기중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얼얼하여 있어 이런 매물들이 실거래 되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이사철인 봄이 도래했는데도 말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을 보면 이같은 광주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13일까지 매물로 나온 지역 구축 아파트는 2만6073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날 2만3142세대보다 10% 이상 늘어났고, 2년 전 1만8247세대보다는 40%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매물로 나온 아파트들이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로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기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사례까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광주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도 1만여세대나 되고 첨단3지구 인접지역인 장성군 물량까지 합치면 1만4000여세대에 달한다.

최근 몇 년간 민간공원 특례사업·대규모 재건축단지의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기복이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또 다시 수요를 초과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매물 체재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올며 겨자 먹기'로 매물 가격을 낮춰도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거래 성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고 한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기 위해 정부의 미분양 해소책과 함께 주택 수요 진작 방안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주택자 등 주거 지원 계층을 위한 담보대출 금리 인하, 지방을 배려한 대출 규제 완화, 취득·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반짝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한시적 유인책에 불과하다.

이보다는 인구·일자리 유입을 늘려 실수요를 확대하고, 수급 과잉을 완화하는 구조적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52(일간)	정 치 부 370-7040	경 제 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 화 체 육 부 370-7234	관 고 국 370-7070	민 권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9
			독 자 관 리 국 370-7080	세 울 지 사 02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